

감투싸움...시민 안중에 없는 광주시의회

민주 1당 독점 폐해 사흘간 구태정치 보여줘 향후 의정 운영 힘로 예상



김동찬 의장 장재성 부의장 임미란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놓고 사흘째 파행을 겪은 광주시의회가 11일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향후 의정 운영에 힘로가 예상된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 간 '원팀 정신'을 외쳤으면서도, 당선된 뒤에는 오직 '자리 싸움'에만 눈이 멀어 민주당 독점 폐해가 벌써부터 지방의회에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정외당 장영주 의원을 제외하고 2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면서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두 개 파로 나뉘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개원 후 원구성 논의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흘간 파행을 겪

아왔다. 양 측은 수 차례 대화와 협상을 벌였지만, 간극은 좁히지 못했고 결국 23명 의원 중 14명만이 참석해 '반쪽 짜리'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김동찬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장재성 의원을 제1부의장으로 임미란 의원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회 반복과 임시 의장 교체, 법적 소송 등이 예고되면서 시장·시의회 공무원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회

가 사흘동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시의회 파행 배경에는 '감투 욕심'에 혈안인 의원들도 문제로 꼽히지만, 무엇보다 의장 출마자들의 정치적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김동찬 의원이 의장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후보를 사퇴한 상대 진영을 배려하고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고, 반면, 반제신 의원 측도 후보를 사퇴한 만큼 깨끗게 승복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장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배분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의장단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같은 당 의원들이 두 편으로 갈린 모습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한 데다 협의 과정에서 감투싸움까지 벌어져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또 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시 의장을 교체한 내용 등 신임 의장단 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한 데다 두 편으로 갈린 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오는 16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오는 16일 후보등록을 받아 오는 19일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가람 강소특구 지정 추진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의견 제시 혁신도시시간 R&D 연계 촉진도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정책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용희 책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인포'의 '연구개발특구 정책변화와 광주전남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특구 지정의 새로운 모델로서 강소특구제도 도입과 기존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빛가람 강소특구를 지정 추진하고, 기존 광주연구개발특구와 빛가람혁신도시시간 R&D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특구제도는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출범한 이후 광주(2011), 대구(2011), 부산(2012), 전북(2015) 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재 5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개발특구는 지정면적 대량화로 연계가 미흡하거나, 미개발지 정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예방하고 특구의 역할 정립을 위해 규제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로운 모델로, 강소특구제도 도입하고 기존특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정책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박용희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은 지역 내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기술핵심기관을 발굴하고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의 우수핵심기관 중심, 소규모 공간의 집약적 강소특구 모델 도입에 대응하여 한전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할 '가칭'빛가람강소특구 지정·추진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지역전략산업(에너지신산업)이 혁신성장 기반의 가치 창출을 낼 수 있도록 빛가람혁신도시 측은 인근 배후지를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및 혁신도시 시종 2 정책기조에 대응해 광주R&D특구·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혁신융합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야와 광주특구 및 빛가람혁신도시의 특화분야를 연계해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비한 첨단기술 사업과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지방선거 후보 68% 선거비용 전액 보전 청구

653명 중 443명 119명은 한푼도 못받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지역 후보 가운데 67.8%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후보 653명 가운데 443명(67.8%)이 선거비용 100% 보전을 청구했다.

91명(13.9%)은 50% 보전을 청구했다.

전액 또는 절반 보전을 청구한 534명을 제외한 나머지 119명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6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못 건지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절반을 받도록 규정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시 태

스크립스'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정당·후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전 청구, 회계 보고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 내용은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대가 금품 제공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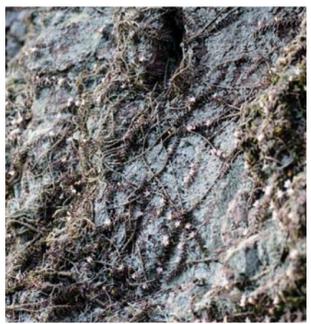
다만,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 제기 등이 없으면 현행 사실에서 제외한다.

선관위는 또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법안·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 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 용도 지출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92건에 대해 고발(6건) 등 조치를 하고 보전 청구 비용 256억7000여만원 중 41억9000여만원을 감액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 나로도서 멸종위기종 '지네발란' 자생지 발견



고흥 나로도에서 멸종위기종인 '지네발란' 자생지가 발견됐다.

11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고흥 나로도에서 산림자원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지네발란이 해안 암반에 붙어 100㎡ 규모로 자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네발란은 줄기에 붉은 잎 모양이 지네를 닮았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상록성 여러해살이 착생식물로 줄기는 딱딱하고 가늘며 줄기 곳곳에서 굵은 뿌리가 내린다. 꽃은 7~8월에 연한 붉은색으로 피며 잎겨드랑이를 뚫고 꽃대 끝에 1개가 달린다.

관상 가치가 높고 희귀하지만, 무단 채취로 개체 수가 감소해 2005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전남, 제주 10곳 미만의 자생지가 보고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제기후산업전 찾은 어린이들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국제기후산업전. 포스코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기자동차의 강판 도면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혁신·소통·청렴 시정 실천 '시민권익위' 발족

생활불편·정책 해법 모색...이용성 시장·최영태 교수 공동위원장

광주시가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인 혁신, 소통, 청렴을 통해 시민 봉사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한다.

시민권익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용성 시장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회, 행정 등 3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 시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평적 협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성 시장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

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100일 내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

이후 2단계로 공약사업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의 지속적인 운영을 포함한 현재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